

特別講演要旨

GATT/BOP 졸업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IMPACT of GATT/BOP/UR IMPORT LIBERALIZATION ON KOREAN AGRICULTURE

김 성 훈 Prof. Kim, Sung-Hoon
(중앙대 산업대 교수) Chung-Ang University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시작된 것은 수출지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7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른바 비교우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당시 저임금-저가격-수출증대의 논리에 따라 부족 농산물의 도입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개방농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농산물 수입개방 품목은 국내생산이 없거나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1989년 우리나라가 가트의 권유를 받아들여 18조 국제수지 (BOP) 조항을 졸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면 가트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가트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세계 1백 25개국에 가입한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교류분야의 최고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가입한 바 있다.

가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는 국제시장 확보와 식민지쟁탈등 자국보호주의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제무역체계를 수립한다는 이념 하에 창설된 국제협약이다. 그래서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회원국간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 철폐 등 자유무역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트의 전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무역에서의 수량제한을 할 수 없으나 (11조1항), 국제수지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거나 (12조), 생활수준이 낮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개발도상국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18조). 우리나라는 가입 이래 18조 B항에 의한 수량규제 허용국가였으며 매 2년마다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86년 이래 4년간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89년 10월 27일 우리나라는 가트에 더이상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얹기로 가트에 약속하고 말했다. 93년 현재 이미 농산물 수입 자유화율이 93.9%나 되고 UR협상결과 여하에 따라 우리 농업 최후의 보루이자 식량안보의 마지막 수단인 쌀마저 수입을 강요받는 현재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UR 협상에서는 쌀등 기초식품 (Grandfather 조항에 따른 보호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GATT/BOP 졸업에 따른 무조건적인 나머지 농산물의 수입개방 일정은 GATT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계속될 추세이다.

89년 당시 GATT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97년 7월 1일까지 잔존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가트규정과 일치시키도록 하며 (2) 자유화는 균등하게 하며 (3) 92-94년간 자유화계획은 91년 3월에, 95-97년간 자유화계획은 94년 3월에 제시하며 (4) 매년 수입자유화 실적을 가트에 통보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조항을 졸업함에 따라 92-94년의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 이어 95년 부터 97년까지의 제2단계 수입자유화 계획을 내년 3월 이내에 가트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에 포함된 1백 50개 품목중 1백42개가 농산물이며(실품목수는 59개임) 특히 농수산물 가운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등 쌀을 제외한 기초농산물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은 파멸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단계 개방이 시작되는 오는 95년까지 2년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이들 농산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개방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포기를 의미

한다. 그래서 유예기간과 관세화를 인정하는 UR보다 더 무서운것이 BOP에 의한 개방인 것이다.

아직 이 지구상에서 농업을 순수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없다. 또한 농업인구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리고 농업생산이 GNP(국민총생산) 차지하는 비중에 관계없이 자국의 농민과 농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며, 또한 농업은 국가와 국민의 생생 발전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EC(유럽공동체)의 경우 가격, 소득, 생산비 차지와 함께 환경 및 경관효과에 대한 직접지불(소득보상) 비용은 EC 전체 농업예산의 92%에 이른다. 특히 UR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91년중에도 EC는 농산물 가격지지 예산을 20%나 늘렸고, 수출보조금도 14%를 늘렸다. 국제수지가 90년 이래 줄곧 4년째 적자를 보고있는 우리 현실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특히 89년 가트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농산물 시장개방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94년 3월 이내에 가트에 제출해야 하는 농축산물 1백42개 품목의 '97년 수입개방 일정제시'는 무조건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 UR이 타결되고 협약의 기본적 전제이던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호전이 될 때까지는 최종일정 제출을 연기해야 한다.

현재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를 비롯 소비자, 환경, 종교, 농민단체들은 금년 하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정부당국에 대해 가트 규정의 제원용은 물론, 농산물 개방계획 제시유예를 가트에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다.